

# 가정과 학교, 폭력의 악순환 끊어내야 한다

의정단상

박원중  
전남도의원



최근 공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초등학교 4.2%가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를 보이며 2012년부터 시작된 실태조사 중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초등학교 4~6학년 가운데 4.2%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혀 학교폭력 피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재량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더불어 지난해 접수된 전국의 가정폭력의 건수는 23만 830건에 달하며, 올해만 벌써 8월 말 기준 15만 580건이 접수되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정부의 매년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국가의 미래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집과 학교에서까지 안전한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근래 학교폭력의 양상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교묘한 심리적 압박과 온라인 공간에서 SNS를 통한 괴롭힘이나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등

갈수록 괴롭힘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현재 교육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으로 해결하기엔 그 수위를 이미 넘어섰으며, 현장에서는 급한 불조차 제대로 끄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서로를 부추기는 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에서의 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가법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2018년 접수건수 대비 0.9%이던 구속률이 올해는 더욱 낮아져 0.2%에 그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역시 학교장이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학습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중 가해 이유를 보면 가장 큰 31.5%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였다. 가벼운 처벌과 학교장 재량으로 끝내버리는 학교폭력 사안들로부터 마치 장난처럼 이유 없이 더 많은 학

교폭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7월 제정된 이후 30차례나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현실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가정과 학교의 폭력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인식해 연구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책임을 동반하는지,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깊은 상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아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응방안의 마련하여 아이들이 대화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가정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지방정부, 국가가 모두 협력하여 제대로 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이다. 이러한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판이 되지 않을까.

## 社說

### 10·16 재·보궐선거 당파적 판단 안돼

#### 풀뿌리 지방자치 가치 살려야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부터 시작됐다. 영광과 곡성을 비롯해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구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다. 지역을 위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영광과 곡성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쟁탈전'을 벌이면서 국민의 눈도 전남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대구로 당원과 함께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영광과 곡성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영광에서 각각 지원유세를 벌이며 표심 공략에 안간힘을 쏟았다. '100만 원 기본소득'과 함께 '120만 원 행복지원금'

등 현금 살포성 공약까지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예산 집행도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과 행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정치마저 중앙에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3일 영광에서 지원유세에 나선 각 당 대표의 지원유세도 당파적 이해 득실에 따라 풀뿌리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 몰아간 정당선거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어지도록 냉철하게 후보의 면면을 평가해야 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지역과 지역민을 홀대해 온 중앙정권에 아픈 채찍도 들어야 한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켜서는 지역 발전은 없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결국 유권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서 나온다.

###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야

#### 전남 피해 전년비 112배 증가

중국발(發) 벼멸구로 인해 전남도내 쌀 농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만 9603ha로 추산된다. 지난해 피해 면적(175ha)의 112배, 여의도 면적(290ha)의 68배에 이르는 규모다.

최근 5년 간 평균 피해 면적(3876ha)보다도 5배나 많다. 올해 전국 피해 면적(3만 4000ha)의 57.6%가 농도 전남에 집중된 셈이다. 지난 달 22일 6696ha이던 것이 2주일새 3배나 증가했다. 최근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중국에서 다량 발생한 벼멸구가 7~8월 사이 국내로 날아왔고, 국내에 정착한 후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평균기온이 27.2도로 평년보다 2.6도나 높았고, 폭염일수도 32일로 평년보다 22.7일이나 길어진 점도 불가항력적 재해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벼멸구의 부화일이 7.9일로 20도 미만일 때보다 5일이나 단축되고, 산란 횟수 역시 2회에서 3회로 늘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중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벼멸구가 지난 7월, 저기압 기류와 8월 제9호 태풍 종다리 발생 시 국내로 다량 유입된 사실도 덧붙였다. 전남도 등은 이번 벼멸구 습격을 중국발 중대 농업재해로 보고 이를 정식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

현재 쌀 농가는 쌀값 하락에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 222원을 정점으로 11개월째 하락해 9월 말 기준 17만 4592원으로 폭락했다. 당장이라도 폭염과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 수확기 전에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 폭염에 따른 병해충 확산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다.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가를 위한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벼멸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베이루트의 다허에 지역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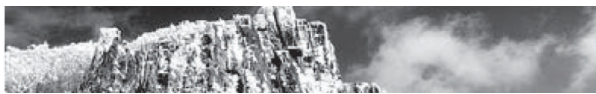
AP/뉴시스

#### 서석대

"수천 명이 죽었다는 마이즈루 침몰 현장, 그것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인류의 불행이다. 그 역사를 후대에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 지난 1995년 일본의 영화 제작자 이토 마사야키 씨가 '아시아 블루'를 개봉했다. 50년 전, 미국으로 빠져버린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 수천 명이 사망하고, 일본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는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영화는 차분하고 절제된 화면으로 그날의 비극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철저하게 계산된 스토리를 통해 보여주는 일제의 만행도 어떤 영상보다 참혹했다.

우키시마호에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945년 8월 21일. 징용으로 끌려갔던 한국인을 가득 실은 4370톤 급 해군수송선 우키시마 호가 일본 오키나와항을 출발했다. 오랜 설움 끝에 맞는 고향으로 가는 길. 하지만 우키시마호는 바로 그날 부산으로 향하던 경로를 벗어나 마이즈루만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24일 오후 5시 20분, 폭발사고로 침몰했다. 해방의 기쁨을 열흘도 채 누리지 못하고, 이국의 바다에 수장된 수천 명의 조선인들. 지금도 그들은 누구인지도 몇 명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깊은 바다에서 원혼으로 떠돌고 있다.

사고 원인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의 기



회에 불가항력으로 침몰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상 믿기 어렵다. '고의적 자폭'이라는 일본의 비밀문서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사망자도 일본은 전체 승선원인 3990명 가운데, 한국인 524명, 일본인 승무원 25명이라고 확인했지만 생존자들은 당시 승선했던 사람이 75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진행했던 진상조사마저 '일본의 발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만 공식화 했을 뿐, 여태껏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키시마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79년. 우키시마호 침몰이 일본 군부의 고의적 자폭일 수 있다는 증거가 지난 1일 또 다시 제시됐다. 지난 9월에는 지금까지 일본이 숨겨왔던 승선자 명부의 존재도 알려졌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 마땅히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전쟁범죄는 더 말할 나위 없다. 반성과 사죄는 커녕 사실마저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그들이 저지른 우키시마 침몰사고는 마사야키의 말처럼 '개인의 불행이 아닌 인류의 불행'이 맞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마저 서슴지 않았던 일본 극우. 반성도 사과도 없는 그들의 뻔뻔함이 인류에게 큰 불행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